

올 겨울 '난방기 순차 운휴'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나서

산업부, 에너지절약 점검·대책회의
“국제 에너지시장 불확실성 확대
유럽사례 참조 수요대책 강화를”
동절기 절감목표·계획 제출 요청

올 겨울 에너지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정 상황이 우려되면서 공공기관들이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200여개 공공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공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실시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태점검 결과를 설명과 함께, 유럽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고조 상황에서 글로벌 에



전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이번주 내로 발표 예고해 동절기를 앞두고 서민 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모습. /뉴시스

너지 수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 비상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1019개 공공기관 중 실태점검 대상 280개 기관이 적

정 난방온도인 28℃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절약추진위 구성·운영이나 에너지지킴이·활동, 소속·산하기관 자체점검 등 기타 점검항목 미준수 기관 67곳에 대해서도 재점검한 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으

로 파악됐다.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지효 박사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EU)의 동절기 평균 가스 소비량 대비 15% 절감조치 등 에너지수급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 동향들을 참석기관들과 공유하면서 “LNG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의 사례 등을 참조해 동절기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 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에너지 절감 노력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적정 난방온도 준수,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 난방기 순차 운휴 등 겨울철 강화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시행하고, 각 기관별 에너지 사용 현황과 올해 동절기 에너지절감 목표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가격급등,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수요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소비 다소비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 등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플랫폼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논의 시작

공정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회의
민간이 논의, 정부서 정책적 지원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 8월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다.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소비자·이용자 측이 제한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플랫폼 업계와 관련 협회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순차적으로 세부 의제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려대 권현영 교수는 “소비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플랫폼과 소비자·이용자 양측이 지속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필요 사항들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이용자 분과회의는 플랫폼 소비자·이용자의 목소리를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등 자회사 11곳, 적자 속 ‘성과급 잔치’

5년간 임직원 성과급 2.5조 달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11곳이 적자를 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2조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검토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2017~2021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8625억원의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5233억원, 한국전력기술 2108억원, 한전KDN 1635억원, 한전KPS 1475억원 순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던 성과급 규모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저유가 특수가 이어졌던 2020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뉴시스

555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5년간 적자가 급증해 완전히 망가진 한전과 자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꼴”이라며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평평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은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 손실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익법인 활용, 기업승계 부담 덜어야”

기업승계 활성화 제도개선 세미나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일자리 및 기술 유지, 헤지펀드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기업의 해외 이전 차단, 장기적 목표 추진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기업승계 문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숙고해봐야 한다며 “이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가 공동 주관해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지우 작가는 스웨덴의 공익법인 사례를 통해 공익법인의 특징을 설명했다.

박 작가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 특징으로 ▲경영권 분쟁 방지 ▲경영권 방어 ▲기업 해외 이전 방지 ▲장기적 관점의 기업운영 ▲가문 재산의 안정적 승계 ▲훌륭한 후계자 선정 ▲소유와 경영 분리 용이 ▲사회 공헌 등을 제시했다.

박 작가는 “공익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오너가 경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 투자 고용 등과 같은 경영 지표가 공익법인을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작가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기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능 없는 상속인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면서 “특히 법인이 공익을 위한 활동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업승계를 위한 세



박지우 작가(왼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제 개편방안’으로 주제 발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과도한 상속세로 꼽으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한국의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아닌 상속세의 문제다”라며 “해외의 여러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 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원관희기자 wkh@

폐기물 수출입업자 보증보험 부담 완화

환경부, 시행령 개정안 27일 시행

앞으로 폐기물 수출입업자가 허가를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수출입 건별로 나눠 낼 수 있게 돼 부담을 덜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출입업자는 포괄허가를 통해 12개월 내 수출입 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보증보험은 한 번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보험료도 한 번에 내야해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출입자가 허가를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내고, 이후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 관련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